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

박 하 정(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)

I. 저출산·고령화 현황 및 미래전망

1. 합계출산율이 '83년 인구대체수준(2.1명)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, '05년 세계 최저수준 1.08명에 도달

- ▶ 지난 2년간 출산율이 연속 증가하였으나, '08년 출생아 수는 8월말 현재 317천명으로 '07년 8월말에 비하여 1.1만 명 감소
- ▶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임기여성(15~49세)이 계속 감소하므로, 장기적으로 출생아수는 감소할 전망

2.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, 총인구는 '18년에 4,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

- ▶ 생산가능인구(15~64세)는 '16년에 3,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
- ▶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년부양비가(65세 이상/15~64세 인구) 급증하여, 생산가능인구 7.9명('05)이 부양하던 노인 1명을 1.4명('50)이 부양

3.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미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협

- ▶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, 평균근로연령 상승으로 생산성 저하
- ▶ 소비감소와 투자 위축, 공적연금 지출 본격화,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급증으로 잠재성장률 하락
 - 잠재성장률이 '00년대) 4.6 → '20년대) 2.9 → '40년대) 0.7%대로 하락

II. 저출산의 원인

- ▶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
- ▶ 미혼남녀의 결혼관·유배우 부인의 자녀필요성 등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을 불러

오는 한 원인

- ▶ 25~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▶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·가정 양립 환경 미흡

Ⅲ. 정부의 대응노력

1.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및 서비스 확대

- ▶ 0~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및 차등보육료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
- ▶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 대하여 둘째아 보육비의 50% 추가지원
- ▶ 시간연장 보육,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
- ▶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·유치원 미이용 1세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
- ▶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전자카드(I-사랑카드)를 발급하여 정부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

2. 임신·출산 지원

- ▶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
- ▶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검사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('08.12)
- ▶ 저소득층 가구(최저생계비 200% 미만)의 임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6개의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확대
- ▶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강화
- ▶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·의료비를 지원하고, 미혼모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100% 지원

3. 아동의 건전한 육성

- ▶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드림스타트
- ▶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(CDA, Child Development Accounts)
- ▶ 맞벌이·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교실 확대
- ▶ 독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조기 투자 확대
- ▶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처방·영양관리 서비스 제공
- ▶ 0~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민간 병·의원까지 확대

4.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

- ▶ 육아휴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
- ▶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 부여
- ▶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 함께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 근무제 확산
- ▶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 부여
 - 인증마크 등 홍보에 활용, 정책자금 융자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
- ▶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컨설팅을 지원, CEO 마인드 변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교육 실시
- ▶ 둘째자녀는 1년,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실시

5.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

- ▶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해결하기에 한계
 - 결혼·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
- ▶ 일간지, 월간지 등 언론과 공동으로 다양한 기획 및 캠페인 추진
- ▶ 인구교육 교재개발 및 배포, 인구교육 실시 등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
- ▶ 저출산대책을 공동 추진할 사회주체들(종교지도자, 학계)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방위적 국민운동 전개